

‘터키탕’이 몰려온다

특수목욕장업으로 분류돼 관광호텔에만 허용돼 왔던 터키탕이 7월부터 신고제로 바뀌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.

93년 8월 이후 퇴폐업소란 이유로 신고허가가 묶이자 주춤했던 터키탕이 규제완화 이후 2백여곳에서 문을 열 채비를 하는 등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.

그러나 이번 규제완화조치를 보는 여성계의 입장은 국민

화해 줄 경우 퇴폐문화를 부추길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.

지난해 말 14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된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개정 공중위생법은 이밖에도 ‘이성 입욕보조자(여성종업원)을 두어서는 안된다’는 등의 목욕업 준수사항 규정마저 삭제해 당국이 매매춘을 조장한다는 혐의마저 벗을 수 없게 됐다.

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정부 제1종합청사 앞에서 규

면서 “관광호텔이 터키탕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시행규칙을 악용해 퇴폐향락업을 되풀이할 의도가 다분하다”고 비난했다.

성명서는 또 그간 유리막을 설치하는 등 입욕보조자가 퇴폐행위를 일질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이 규정이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일반화돼 왔다고 지적하고 “자고나면 신문을 장식하는 각종 성범죄도 퇴폐향락분위기 때문이 명백

한데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선 할 말을 잃는다”고 밝혔다.

이들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중 이성목욕 보조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내국인의 출입



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19일 정부 제1종합청사 앞에서 규제완화 반대집회를 벌였다.

의 건전한 보건생활과 음란퇴폐, 사회병리적 현상 근절의 책임을 지닌 당국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으로 모아진다. 즉 관광객 유치에 위해 허용된 터키탕의 수요가 대부분 내국인이라 규제완화 명분이 없으며, 특히 허가제 아래서도 공공연한 매매춘 장소로 전락해 온 터키탕에 규제를 완

제완화 반대집회를 벌인 한국교회여성연합회,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,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, 한소리회 등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“개정 공중위생법은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염원하는 여성단체,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이 일체 반영되지 않고 음란퇴폐문화를 부추기고 있다”

입을 금지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이와 함께 터키탕이 줄줄이 문을 열 경우 음란퇴폐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조만간 여종업원 부족현상을 불러 낚치, 인신매매까지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섞인 진단도 나오고 있다.